



2023학년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계획

시화나래유치원

1 교권보호 기본계획의 방향

1. 목적

-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유치원 문화 조성
- 교권보호를 통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권침해 교원 구제 및 사전 예방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유치원 문화 창출

2. 추진방침

-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건전한 유치원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교권침해 상담 및 치료지원, 법률 및 소송지원, 교권침해 예방지원 등을 통한 교권침해 예방 시스템 정착
-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예방 연수 지원으로 교권존중 문화 조성

2 시화나래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1. 기능(역할)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대응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구성

-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의 2(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 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
- 위원구성 :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하며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단,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음)
-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홍○○	교원위원(원감)
위 원	박○○	교원위원(교사)
위 원	황○○	학부모위원(운영위원회 위원장)
위 원	조○○	학부모위원
위 원	강○○	지역위원(시흥경찰서 옥구지구대 경사)

3. 회의 운영

■ 회의소집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의준비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사안조자서, 관련자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증거자료 등)
- 대기 장소 준비(피해, 가해 측 대기 장소를 분리해서 준비)

※ 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유치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

3

교육활동 침해 기준

1. 근거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

2. 교육활동 침해유형

유 형	개 념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명예훼손	공연(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위반 행위
불법정보 유통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공무집행 방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성적언동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반복적 부당간섭행위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의도적인 수업방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촬영물등 무단 배포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학교장 판단 유형	학교장이 교권존중과 교원의 신분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한 행위

4

교육활동 침해 예방 계획

1. 학부모 교육

-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 등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연수 실시
- 교육활동 보호 영상 및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2. 교원 대상 교육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연수 실시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활동 침해 사항 발생 시 대응 요령 교육

5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1.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가. 사안 처리 방향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적 지원 강화
 - 유치원구성원 간 인권존중 교육을 통해 예방적 지원 강화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예방을 위한 연수 및 대응 매뉴얼 교육
- 사안 발생 시 적극적 교원 보호
 - 피해 교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나. 무관용 원칙 적용

- 관용적인 태도 지양
- 교육활동 침해는 명백한 위법 행위
- 피해교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처벌 가능(예:공무집행방해죄)
- 상급기관 의무 보고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 은폐 금지

6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안 처리

1.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초기 대응

- 응급 상황인 경우 신고 범죄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 119, 112
- 원장 및 원감에게 상황 보고
- 학교 현장의 안정화 조치
- 관련 피해 교원의 안정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작성 안내
- 관련 학생의 안정 조치 및 보호자에게 연락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조사

가. 관련 피해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접수

- 업무담당 교사는 교권보호책임관에게 보고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장에 작성

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

-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서 접수 시간 이내 k-에듀파인으로 보고 서식
- 관할 교육지원청 협조 요청 및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한 도움 요청

다. 피해교원의 분쟁 조정 의사 유무 확인 및 관련 당사자 의사 확인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진행 준비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분쟁 조정

가. 분쟁 조정의 목적 및 필요성 .

- 자발적 대화 모임을 통하여 평화적 회복적으로 갈등 해결
- 당사자들의 분쟁상황 직면을 통하여 구체적 회복 방안 마련
- 당사자들 합의에 의한 갈등 해결로 재발 가능성 감소

나. 분쟁 조정 절차 흐름

절차	내용	유의점
분쟁 조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및 상대방의 분쟁 조정 의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당사자가 모두 분쟁 조정 의사 있을 때 분쟁 조정 절차 진행
분쟁 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 확인	①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⁸⁾ ② 분쟁 당사자 간 고소·고발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⁹⁾ ③ 분쟁 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시 거부 등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분쟁 조정 방법 결정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절차 진행 ② 분쟁 조정 전문가를 연계하여 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연계조정 절차 진행에 대한 관련 당사자 동의 확인 ([서식9] 참고)
분쟁 조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또는 전문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 의견 및 요청사항 청취 중재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서 작성할 때 합의 내용에 유의
결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 조정 성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서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 분쟁 조정 불성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의 재조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의 재조정 신청시 양 당사자 모두 분쟁 조정의사 필요
결과 보고 및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교육지원청에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식17] 참고

다. 분쟁 조정 전문가 연계 조정 절차

1) 내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6항 분쟁 조정 전문가 연계를 통한 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

2) 신청 방법

- 분쟁 당사자 모두 전문가 연계 조정 진행에 동의한 경우 신청가능
- 학교장이 관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 신청서를 K-에듀파인으로 제출
- 관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분쟁 조정전문가 기관을 연계 (신청 후 연계까지 1~3소요)

3) 결과보고

- 분쟁조정 전문가는 관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및 해당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분쟁 조정의 결과를 보고

4) 비용지급

- 소요되는 비용은 관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분쟁 조정 전문가에게 지급

5) 업무 처리절차



※ 분쟁 조정 사전모임과 대화모임 진행 시 학교는 시간 안내와 장소 확보(2곳 이상)

라. 분쟁 조정을 진행할 때 유의 사항

1) 분쟁조정시 기본원칙 준수

- 설득하지 말고 설명하기/ 답을 주거나 판단하지 않기/

당사자 간 오해 불일치되는 부분 확인하기 /사과 종용하지 않기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 절차를 준수한다.

- 개의 정족수 제척 등 사유 확인 등 ,

- 분쟁 조정 시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3) 분쟁 조정 과정에서 인권침해 공개 사과 사과문 낭독 등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분쟁 조정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심의 하지 않으므로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및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음을 당사자에게 반드시 안내

- 피해교원이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조정 절차가 아닌 심의 절차로 진행

5) 분쟁 조정 합의서 작성 시 피해 보상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과 약속 불이행 시 후속 조치 내용에 대하여 합의 가능

마. 분쟁 조정 합의 후 해당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 분쟁 조정 성립 시에도 해당 교원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1인당 한도150만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교원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구상권 행사와 무관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흐름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발생한 사안이 ①교육활동 침해 주체에 해당하는지 ②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인지 ③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등을 피해 교사의 진술, 관련 학생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여부를 심의

2) 침해 학생 조치 심의

침해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 침해 학생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심의한다.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기준: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1-26호)

제3조에 규정된 별표 교육활동 침해 학생조치별 적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결정할 때

<기본>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③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 회복정도
- ④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고려하여 판단

<추가>

-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조치를 감경할 수 있음
- ② 피해 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 합의 점수 도출

- (1) 각 기본 판단 요소의 합의 점수를 도출하고 만장일치 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을 내지 않도록 유의)
- (2) 추가 판단 요소의 경우 감경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때 감경 가중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시 유의사항

1)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학생 또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 시 심의 사안의 요지(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등 구체적 사실 포함) 를 기재하여 통지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서면 진술의 기회를 부여

2)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회의의 비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 제3자의 회의 방청 사안과 관련이 없는 제3자는 회의에 참여하거나 방청할 수 없음
- 변호사 참석 여부 사안의 당사자가 법률대리인 변호사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의 참석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 : 피해교원 침해자 등 당사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4) 침해 학생 조치의 내용

-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침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에 보호자 참여등

5. 조치 결과의 통지 및 불복 절차 안내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서 통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 학교장에게 통보.

나. 학교장의 조치 결과 통지 .

-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

- 조치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당사자에는 피해 교원도 포함되므로 피해 교원에게도 통보
- 결과통지는 문서로 하며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기재. 또한 학생에게 그 조치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림

다. 침해 학생의 불복 방법 .

- 1) 전학, 퇴학: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립학교는 민사소송
- 2) 그 외 조치: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립학교는 민사소송

라. 피해 교원의 불복 방법

-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한 경우” 「교원지위법」에 피해교원의 재심 청구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로 진행할 수 있음.
- 2)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내용(‘조치 없음’ 결정 포함)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

가.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발생 시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 접수 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48시간 이내에 사안의 발생 보고

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 언론사안, 법률지원 요청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보고한다.

라. 사안 발생 보고 및 결과 보고 안내

	발생 보고			결과 보고		
	기한	양식	절차	기한	양식	절차
학교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보고 [서식5]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k-에듀파인 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종료 후 5일 이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결과보고서 [서식17]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k-에듀파인 보고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중대사안, 언론사안, 법률지원을 요청한 경우 •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로 k-에듀파인보고 (학교 공문 접수 후 48시간 이내) •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후 학교 보고양식으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사안, 언론사안, 법률지원 요청한 사안으로 발생 보고된 사안의 경우 •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로 k-에듀파인 보고 		

7. 기대효과

-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
- 스승존경 풍토 조성 및 교권강화를 통한 행복한 유치원문화 조성

1. 개요

가.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4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나. 목적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지원
- 전문적인 치유 기관 연계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회복 도모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지원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

다. 보호조치의 주체 : 관할청.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라. 보호조치의 내용

- 특별휴가/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공무상요양 승인 및 공무상 병가
-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비정기 전보 요청

2.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 기본방침 및 세부계획

가. 기본방침

-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내용은 침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경기도교육청에서 선 부담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침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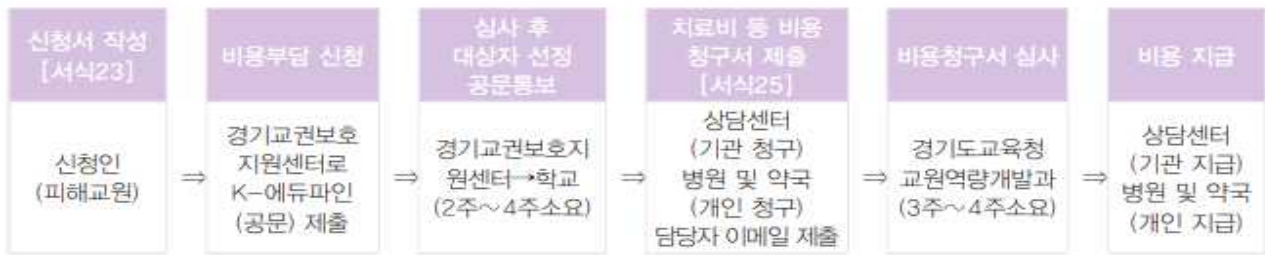
나. 세부계획

- 지원대상: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피해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 지원한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1인당 150만원 한도(2023년 증액)
- 지원기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부담 지원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 또는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객관적인 피해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 피해교원의 보호조치는 신속함을 요하므로, 적어도 대상자 선정 통보된 달 또는 침해가 있었던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치료시작 필수
- 지원비용
 - ①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한 경기교원보호지원센터 상담·심리 협력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드는 비용
 - ※ 심리상담 비용지원은 협력기관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피해교원이 원하는 기관으로 이용 가능하며, 심리상담 비용지원은 협력기관만 가능
 -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형외과 등 병의원의 진료비 및 약처방에 드는 비용을 의미
 - ③ 타기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및 기타 보험 등에 의한 보상과 중복지원 불가

다. 대상자 선정 기준

-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판단 여부
- 원장의 보호조치 비용 선부담 요청 결정 여부

- 교육활동 보호조치 비용 심사위원회에서 비용부담 신청 사유의 정당성 심의
라. 절차



3. 행정사항

가. 보호조치 비용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서,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보
서(피해교원용)를 첨부하여 보호조치 비용부담 지원 요청 공문 시행
(수신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 비공개, 6호)
- 심리상담이 필요한 피해교원은 초기 상담 신청서를 보호 조치 비용부담 지원 요청 공문에
함께 발송(수신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 비공개, 6호)

나. 치료 개시 및 기관 선택

- 경기교권보호센터에서 발송하는 ‘보호조치 비용부담 대상자 선정’ 공문 접수 후 치료 개시
- 협력기관 또는 희망기관 선택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협력기관[붙임] 중 지역과 상관없이 원하는 기관 선택가능
 - 협력기관 이외의 심리상담센터는 보호조치 비용지원이 불가함
 - 교권보호지원센터 협력기관 방문 시 사전 전화예약 필수
 - 병·의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

다. 비용청구 방법

- 협력기관 이용(교원은 기관에 비용지불하지 않음) → 협력기관이 교육청에 직접 비용 청구(protectgoe@korea.kr)
→ 협력기관으로 비용 지급
- 희망기관(병·의원) 이용 → 피해교원이 청구 서류 제출(protectgoe@korea.kr)→ 피해교원 개인계좌
(청구서에 기입한 계좌)로 비용 지급

시화나래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3.4.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나래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 ① 교원지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유아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유치원 유아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및 자격상실)

- ① 원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해당 유치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소속 유치원을 달리하게 된 때
 - 2.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유아가 소속 유치원을 졸업, 전학 또는 퇴학(자퇴 포함)된 때, 다만, 해당 유아가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6조(위원장)

-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당사자 출석)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은 7일 이내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

-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② 유치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유치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한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① 즉시 조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사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한다.
- ② 관련자료 수집: 시기, 내용, 관련 유아, 상황 파악을 하여 유치원장에게 즉시 사안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사실관계조사: 사고경위서 및 일지 작성(6하원칙), 목격자 진술 확인, 진단서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④ 조정 . 중재활동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 중재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해 교원과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되, 피해 교원의 경우에는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다.
- ⑤ 제4호에 따른 조정 . 중재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 ⑥ 고소 . 고발 및 소송: 심각한 피해 발생 또는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시 경기도교육청교육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 . 고발 및 소송 절차를 밟는다.
- ⑦ 해결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11조(분쟁조정의 신청)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분쟁조정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진행한다.

제13조(분쟁조정의 성립 및 결과 처리)

- 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분쟁조정이 성립한다.
-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한다.
 -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당사자의 의견
 - 3. 조정의 결과
- ③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한다.

제14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 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치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유치원교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원장은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⑤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어느 한 쪽이라도 계속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로 사건을 이송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6조(회의록의 작성)

-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이 서명한다.

제1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①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분쟁당사자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분쟁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겸직허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권보호위원회 참고 사항>

- 개념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짐
- 법적 지위 :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자문 기구
- 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